



세계 노사정 소식

미국

미국 : 경기회복기 전체소득은 제자리, 상위 1%의 소득은 증가

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회복기에 상위 1%의 소득은 11% 이상 증가하였지만 그 밖의 계층의 소득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즉 버클리 대학교 경제학자 엠마누엘 사에즈가 집계한 수치를 보면, 전체 소득은 단 1.7%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상위 1%의 경우 11.2%나 소득이 증가한 것과 나머지 99%는 0.4%가 감소한 것이 크게 대비된다.

사에즈 교수는 “대불황은 고소득자들의 소득을 일시적으로만 정체시켰고, 197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한 전체소득에서 그들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원래대로 되돌리지는 못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고소득자와 그 외의 계층 간의 이러한 불균형은 각각의 소득원천을 통해 일부 설명이 가능하다. 즉 높은 실업률로 임금소득자들의 소득은 계속해서 하락한 상태였지만, 부자들의 경우 지난 4년 동안의 주식시장 활황 덕을 봤다.

중도좌파 성향의 경제정책연구소의 로렌스 미셀씨는 “높은 실업률은 향후 30년간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이는 모든 계층에서 임금상승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러나 중간계층보다 하위계층이 더 타격을 입을 것이고, 상위계층보다 중간계층이 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에즈 교수는 2012년을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추세가 역전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 1월 의회를 통과한 부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안을 언급하면서 2012년에 “주식가격 상승과 더불어 2013년의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소득을 미리 지급받음으로써(가령 스톡옵션을 미리 행사함으로써-역자) 상위 1%의 소득이 크게 상승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 상위 1%를 제외한 “99%의 소득증가는 매우 저조한 것 같다”고 말한다.

투자소득을 제외하고, 2011년 상위 10%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1917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 하락에 대한 우려와 높은 불평등 수준의 지속은 이번 주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강하게 반영되었다. 그는 이러한 추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연방최저임금을 7.25달러(한화 약 8,000원)에서 9달러(한화 약 9,940원)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통해 2015년 말까지 1,500만 명의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이 나라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가난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자”고 역설하였다.

경제수석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놀랄 만큼 높은 불평등 수준에 자극받았고,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였다고 전한다. 그 정책들에는 가장 부유한 소수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 건강보험개혁법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중산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피케티와 사에즈 교수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상위 1%의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는 2009년 불황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최고점에 도달했다. 금융위기와 그 여파로 부자들은 다소 어려워졌지만 이후 그들의 소득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근로자 가구들의 상황은 좋지 않다.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중위가구소득은 지난 2년간 감소해 왔다. 2011년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극빈층의 소득은 정체되었고 중산층의 소득은 감소하였다. 2011년 50,054 달러(한화 약 5,527만 원)였던 중위가구소득은 1999년 수준보다 약 9% 감소하였다.

그런데 불평등지수는 세전소득을 사용하는가 아

니면 세후소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사회보장연금, 식품구입권 등과 같은 정부이전소득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코넬대학교 경제학자 리처드 버크하우저 교수는 소득, 세금, 이전소득, 건강보험과 같은 혜택을 고려하여 중산층 가정의 경제적 건전성을 측정하려 하였다. 그 결과 1979년부터 2007년까지 중위소득은 약 18.2% 증가하였는데, 소득만 고려한다면 이는 단 3.2% 증가에 불과한 수치이다.

버크하우저 교수는 피케티와 사에즈 교수의 수치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다르게 보상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인 반면, 자신의 수치는 “사람들에게 가용한 자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피케티, 사에즈 교수의 문제제기는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에게 어떤 자원들이 가용한가’라고 묻는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른 질문이다”라고 버크하우저 교수는 말한다. 예컨대 오바마 정부의 진보적 정책들의 상당수가 소득불평등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영향을 경감하는 것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에 반해 사에즈 교수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을 사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획기적인 규제와 조세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경기하강 국면에서 소득 집중현상이 완화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사에즈 교수는 분석하고 있다.

증세와 금융시장 규제를 비롯한 최근의 정책변화는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이나 대공황 당시의 정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소득 집



중현상이 앞으로도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2013년 2월 15일자, 'Incomes Flat in Recovery, but Not for the 1%'

미국 : 야후 사(社), 재택근무 폐지 논란

마리사 메이어는 야후의 최고경영자가 된 후 이 인터넷 선구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다시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녀는 전 직원들에게 무료식사와 새 스마트폰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직원들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한 것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야후의 인사과는 이 정책변화가 직원들이 직접 부딪치면 더욱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구글의 정책이기도 하다.

야후가 기업 정상화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작업장 이슈들 중 하나를 건드린 것이다. 즉 재택근무를 비롯한 유연한 근무조건이 더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혁신과 협력을 방해하는가? 에트나, 부즈·앨런 앤드 해밀턴, 그리고 자포스 닷 컴 역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바 있고, 재택근무 시스템을 갖추었던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작년 말 근로자들에게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젊은이들이 집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전반적으로도 유연한 근무조건을 점차 선호하는 추세라고 말한다.

캘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사의 최고경영자 존 캘린저 씨는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 도입

을 주저하는데 이는 업무통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경영학과 존 설리번 교수 역시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생산적이지만 창조성은 더 떨어진다고 말한다. 즉 “직원들이 창조적이기를 원한다면 사람들과 부딪치게 만들어야 하고, 생산적이기를 원한다면 집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야후의 이와 같은 정책변화는 유연한 근무조건 도입을 옹호하는 사람들로부터 퇴행적인 조치라며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들이 분개하였는데, 마리사 메이어의 경우 37세로 최고경영자의 자리에 오르면서 첫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쓸 것으로 기대한 것도 한 몫 하였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여성사학과 루스로센 명예교수는 “그녀 자신은 유리천장을 깨뜨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여성들이 가정을 돌보는 동시에 기술과 경력을 쌓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논평했다.

유연한 근무조건은 여성만 원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하는 남성들의 수

도 상당하다. 즉 미국 고용노동자들 중 24%가 매주 최소 몇 시간은 집에서 근무한다고 한다. 그리고 가족·노동 연구소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작년에 63%의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하였는데 2005년에 이 수치는 34%에 불과하였다. 그 연구는 불황기에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요구하는 고용주들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근무조건 유연성을 12%나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부동산 비용과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화상통화부터 메신저까지 실리콘 벨리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재택근무를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야후처럼 많은 기업들은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일하면 혁신이 증가된다고 믿고 있다.

야후의 인사과장 잭키 레세스 씨는 회사 블로그에 “가장 좋은 결정과 아이디어는 복도와 식당 토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즉석 팀미팅으로부터 나온다. 집에서 일하면 신속함과 정확함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BGC 파트너사에서 일하는 콜린 질리스 씨는 그 문구가 구글의 정신을 야후에 심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그는 “마리사 메이어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문화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녀는 구글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적용하려 하고 있는데, 구글은 당신이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사내에 머무르기를 권

장한다”고 말한다.

물론 구글과 페이스북은 사안에 따라 직원이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대면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리콘 벨리 기업들은 카페테리아에서 음식을 공짜로 제공하고, 통근버스나 체육관, 아이스크림 가게, 드라이크리너 등을 공짜로 제공하는데 이는 종업원의 편의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주간에 다른 직원들과 더 많이 접촉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거의 모든 정보통신 기업들은 벽을 허물고 책상들을 서로 인접하게 배치하였고, 소파와 안락의자가 있는 공공장소를 가지고 있다.

유연한 근무조건을 철회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 기업뿐만이 아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기타 보험 및 금융회사들은 민감한 고객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

물론 재택근무를 늘리는 회사들도 있다. 에트나의 경우 47%의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2005년의 경우 9%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회사는 7,800만 달러(한화 약 872억 원)의 부동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에트나 대변인 수산 밀러릭 씨는 말했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2013년 2월 25일자, 'Yahoo Orders Home Workers Back to the Office'



미국 : 저소득층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입학률 저조로 경제적 불평등 심화

대학입학자격시험을 치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시험성과와 등급이 뛰어난 저소득층 학생들 대부분이 상위권 대학에 지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졸업자가 비졸업자에 비해 훨씬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신분 간 이동을 가로막는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우수했던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라인 학스비 교수와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토퍼 애버리 교수에 따르면, 소득하위 25%이하 가구의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 중 34%만이 입학이 까다로운 전국 238개의 대학에 들어갔다. 상위 25%의 학생들의 경우 이 수치는 78%에 달한다. 연구자들은 우등생의 정의를 일류대학 입학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학생들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대략 전국 4%에 해당한다. 대학입학자격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경우 최소 평균 A-나 상위 10%에 들어야 한다. 이러한 우등생들 중 34%는 소득 상위 25% 이상 출신이고, 27%는 25~50%, 22%는 50~75%, 그리고 17%는 하위 25% 이하 출신이다.

저소득층 우등생들은 대부분 커뮤니티 칼리지나 집에서 가까운 4년제 대학들을 선택한다. 그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몰랐거나 단지 주변에 상위권 대학을 입학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생각조차 않는다.

그들의 이러한 선택이 결국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니는

대학들은 일류대학들에 비해 재정이 부족하고 졸업률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졸업하더라도 일류대학 졸업자들보다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

이 연구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교육기회의 박탈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공격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앰허스트 대학의 입학관리관 톨 파커 씨는 이 연구가 “전국단위의 표본집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데, 그렇게 많은 저소득층 우등생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며 대학들은 그들이 지원하게끔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국 15개 대도시 지역에서 저소득층 우등생들이 좋은 대학들을 지원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브리지포드, 펜피스, 새크라멘토, 오하이오 주의 톨레도, 오클라호마 주의 투슬라와 같은 그보다 작은 규모의 대도시들이나 시골의 경우 그 비율이 현격히 떨어진다.

만약 대법원이 인종기반의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선고를 내리면, 일류대학들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학생들을 모집해야 한다는 압력을 곧 받게 될 것이다(2008년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탈락한 한 백인 여학생이 소수자 우대정책에 의해서 역차별을 받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함—역자). 텍사스 주립대학이 연관되어 있는 이 소송은 6월 말 이전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대학들은 현재 입학사정제도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같은 인종의 부유층 학생들에 비해 특별히 우대하지 않고 있다. 소수자 우대정책을 제한하는 판

결이 내려지면 대학들은 소득, 주변환경, 가족구성 같은 다른 사회경제지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이 지출하는 학자금 지원금액을 크게 늘려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어려운 환경의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등록하게 될 것이다.

서부 텍사스에서 자란 남가주 대학교 2학년생 위노나 레온 양은 이러한 결과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목장이 많은 포트 데이비스 타운에서 17명 규모 졸업생들의 대표였다. 그곳은 심화 학습반이나 대학입학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거의 드문 곳이다. 그녀는 “우리 스스로 헤쳐나가야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처음에 멀리 있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높은 생활비나 집에 올 비행기표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

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기관인 퀘스트브리지로부터 편지를 받고 나서, 일류대학들의 경우 학자금 지원이 많기 때문에 텍사스의 주립대보다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가난한 우등생들이 일류대학들에 진학한다면 거기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것이다. 최근 데이터는 그러한 학생들 중 89%가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좋지 않은 대학으로 진학한 저소득층 우등생의 경우 졸업률은 50%에 불과하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2013년 3월 16일자, 'Better Colleges Failing to Lure Poorer Strivers'



유럽

EU : 2012년 유로존, 일자리 100만 개 감소

지난 2월 2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12~2014년 경제전망안을 발표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경유가 그렇듯, 몇몇 유럽 국가 지도자들은 실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으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유럽 지도자들은 실업률을 낮추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월 22일 발표한 예상안에 “노동시장 전망은 국가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상되고 있는 실업률의 증가는 몇몇 적은 숫자의 국가에서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유로존에는 2012년 1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2013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원회는 발표했다. 27개국 전체 실업자 수는 2,6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나라마다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이고 특히 몇몇 국가에서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올리 랭(Olli Rehn) 경제 및 통화 담당 위원은 밝혔다. 부채 위기가 잠시 휴지기에 있지만, 실경제 위기가 유럽의 노동시장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실업률은 2013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여 27개국 평균이 11.1%에 이를 것이고, 유로존 평균은 12.2%에 이를 것으로 전

망된다.

유로존 경기는 올해 약간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일어났던 갑작스런 경제후퇴에 노동시장이 큰 영향을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계속되는 재정위기 속에서 산업과 서비스업의 불황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균형의 회복

2014년 실업률이 1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또는 룩셈부르크에 비해서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지만, 전례 없이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다른 남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이다.

스페인에서는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올해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이 실업에 처했다. 포르투갈은 이들 국가에 비해 아주 조금 나은 상황이다. 경기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에 기대고 있는 이들 국가에서의 청년실업은 2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원회는 경제위기가 일어나기 전, 여러 해에 걸쳐 폭발적으로, 하지만 지속되기 힘든 방식으로 성장한 분야에서 주로 노동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 예로 스

페인의 부동산 분야가 있다. 이는 시장 신뢰를 다시 찾고자 하는 외국 자본의 임대자들이 긴축을 요구하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는 “균형을 회복하려는 현상”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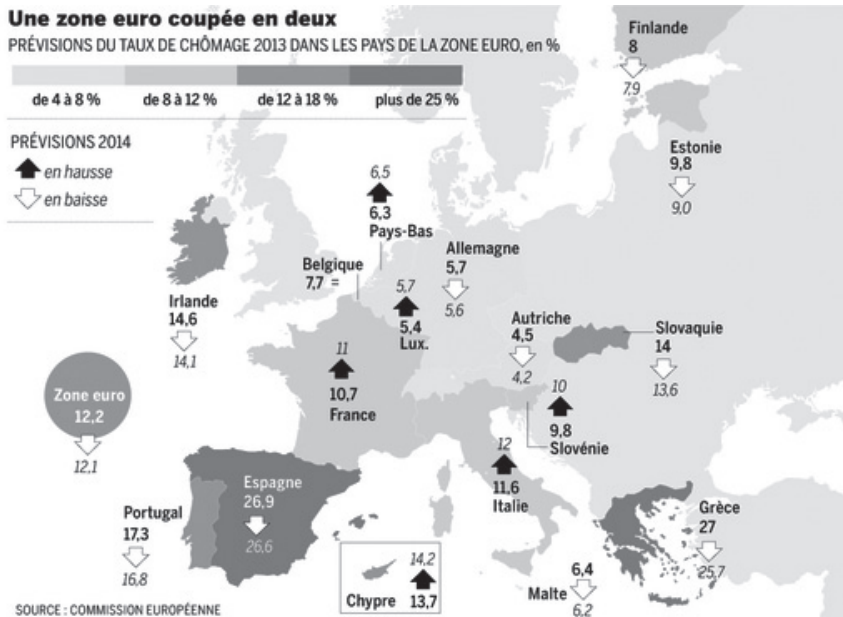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 실업률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2012년 말 유럽 실업자 2명 중 1명은 이미 1년 이상 실업상태인 장기 실업자들이었다. 모두가 기대하는 일시적인 호전은 2014년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은 네 등급으로 나누어 2013년 실업률 전망을 표시하고 있으며, 덧붙여 화살표로 2014년 실업률 예상 증감률을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26.9%의 실업률이 예상되는 스페인의 경우 25% 이상의 실업률 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

장 짙은 색으로 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등급의 나라로 그리스가 있다. 이들 국가보다 상황이 조금 나은 국가로는 포르투갈(17.3%), 아일랜드(14.6%), 슬로바키아(14%), 키프로스(13.7%)가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그 다음 등급에 위치하나 2014년 전망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3년 예상 실업률인 10.7%에서 11%로, 이탈리아도 11.6%에서 12%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나라에 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실업률은 5% 전후로 다른 국가들보다 확연히 나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출처: Le Monde, 2013년 2월 25일자, ‘En 2012, un million d’emplois détruits en zone euro’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13년 경제전망보고서, 2013년 2월 22일 발간

양분된 유로존 - 2013년 유로존 국가들에서의 실업률 전망(%)





독일 : 독일 연방상원 최저임금 법안 통과

독일 연방상원의회가 산업별 영역을 불문한 법정 최저임금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50유로(한화 약 12,500원)로 결정되었다.

독일은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단체협약을 활용한 산업별 최저임금제가 점차 그 적용영역을 확대해 가는 상황에 있었지만, 산업영역을 불문하고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르츠(Hartz) 개혁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바탕으로 제기된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는, 지난 2005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사민당(SPD)과 녹색당(Grüne)이 선거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정치권의 주요한 노동관련 정쟁이 되었다.

이러한 법정 최저임금제 법안은 이미 지난 2012년 4월에 여당인 기민당(CDU)에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었으나,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FDP)의 계속된 반대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몇 차례 주 의회 선거에서 사민당(SPD)과 녹색당(Grüne) 및

좌파당(Linke) 연합이 승리를 거두고 다수 의석을 확보하며 이번 법안통과를 이루어 내었다. 여기에는 거대 연정(기민당-사민당 연합)으로 주 정부가 구성된 자를란트(Saarland) 주 수상인 기민당(CDU) 출신 Annegret Kramp-Karrenbauer의 지지도 한몫을 하였다.

하지만 이 최저임금제 법안의 경우 연방하원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이 법안의 실시 여부 및 시행시기와 관련한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하원의 경우 기민당(CDU)과 자민당(FDP)이 사민당(SPD)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적 격차와 현 임금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전면적 법정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대해서는 기민당(CDU)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과연 연방상원의회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로 보인다.

- 출처: 타게스샤우(Tagesschau)지, 2013년 3월 1일자, 'Bundesrat stimmt für gesetzlichen Mindestlohn'

독일 : 파산기업 수 감소한 반면 손실액은 증가

유로존의 경제위기 및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래 지난해 독일의 파산기업 수는 최저를 기록하였다.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은

28,304개로 전체 기업의 6% 이하로 감소했다고 독일 통계청이 밝혔다. 파산하는 업체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03년에 39,000개 이상의 기업이 파산과정

에 있었던 것에 비하면 약 10,000개 이상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지난 2012년 12월에는 평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885개 업체가 파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관재인연합의 위원장인 Christoph Niering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2013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파산으로 인해 확정된 손실액은 약 517억 유로(한화 약 76조 원)로 그 전해에 비해 200

억 유로(한화 약 30조 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산기업에 솔레커 및 태양력 발전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이 포함되어 파산업체의 수에 비해 손실 규모가 컸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의 경우도 97,635건으로 약 5.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Impulse, 2013년 3월 12일자, 'Deutlich weniger Firmenpleiten – aber höherer Schaden'

스웨덴 : 파산한 승용차 회사 사브(SAAB) 직원 10명 중 7명, 구직에 성공 혹은 교육 중

2011년 12월에 파산한 스웨덴 승용차 회사 사브의 직원들은 파산 직후에 국영고용센터와 고용안정재단으로부터 전직지원 또는 교육지원을 포함하는 지원을 받았다. 최근 국영고용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사브 전 직원 10명 중 7명이 구직에 성공했거나 또는 교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브가 파산하면서 전체 3,700명이 실직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사브 직원뿐만 아니라 사브에 납품하는 업체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수도 포함된다. 바로 전직에 성공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전체 실직자 3,700명 중 3,390명이 국영고용센터에 등록하고 구직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영고용센터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이들 중 69%가 2013년 2월 현재 구직에 성공하였거나 교육

에 참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565명이 특별히 국영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구직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400명의 예전 사브 직원들이 국영고용센터의 지원을 받으며 교육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영고용센터는 이렇게 높은 비율로 전 사브 직원들이 구직에 성공했거나 혹은 교육 중인 것에 만족감을 표시했는데 이는 국영고용센터뿐만 아니라 지역 사업가, 성인 교육기관,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모두가 협력해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사브 직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유럽연합의 글로벌펀드가 일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국영고용센터, 2013년 2월 7일자, 'Sju av tio Saab-anställda till jobb eller studier'



스웨덴 : 정부, 저학력 청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지속

스웨덴의 독특한 교육제도로 시민고등학교(folk high school) 제도가 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제때에 마치지 못한 성인들을 위한 성인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12/2013교육연도 간 연령이 16세에서 25세 미만의 실업자이면서 초·중·고 교육을 마치지 않은 청년층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시민고등학교에 경제적으로 특별 지원을 하였다. 이는 저학력 청년의 교육 수준 향상을 통해 이들이 실업을 벗어나는 것을 도우려는 의도이다.

최근 스웨덴 정부는 2012/2013교육연도 특별 지원을 2013/2014교육연도에도 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시민고등학교에 약 7,600만 크로나(한화 약 134억 원)에 해당하는 정부 예산 지원을 의미하며 해당 인원은 연평균 약 1,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국영고용센터의 2013년 초 연구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2/2013교육연도 간에 시민고등학교에 참가한 청년 10명 중 4명이 구직에 성공하였거나 일반 대학 또는 직업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예산 투자 결과로 2012/2013교육연도 간

시민고등학교 참가 청년의 수는 3,845명이었는데 이는 2011/2012 교육연도의 시민고등학교 참가자 수 2,252명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의 청년층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은 2010년에도 이루어졌는데, 2010년에 시민고등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대를 위해 실시한 약 3개월 간의 특별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의 수는 약 7,000명에 달했다. 국영고용센터의 분석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 수료자 중 약 20%(1,436명)는 그 이후 노동시장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7%(1,200명)는 어떤 형태인지는 막론하고 구직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1. 국영고용센터, Arbetsförmedlingen, 2013년 2월 25일자, 'Folkhögskolesatsningen: Fyra av tio ungdomar till jobb eller studier'
- 2.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Budget 2013: Studiemotivering på folkhögskola. Förlängning av satsningen på studiemotiverande kurs på folkhögskolan'

영국 : 장기 실업자 프로그램, 낮은 실효성에 논란 일어

영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정부의 실업자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하원의 결산위원회는 관련 보고서에서, '근로연계 복지(welfare to work)'가 시행된 지 14개월이 경과 하였지만 참가 대상자의 3.6%만이 안정적 고용상

태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2011년 6월부터 시작된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은 장기 실업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등의 사회복지 혜택의 수급 전에 근로 프로그램의 참가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까지 약 5년 동안 30억~50억 파운드(한화 약 5조~8조 3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연립정부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이다. 장기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기업에 대한 임금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은 근로의욕의 고취 및 실업률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업자의 희망과 연계되지 않은 저임금 근로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강제노동 문제, 복지수급권 침해, 고용지속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하원 결산위원회 위원장인 마거릿 호지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예산의 낭비일 뿐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출된 고용은 일시적이며 불안정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연계서비스협회의 필립 커리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작동하

고 있다고 하면서, 결산위원회의 보고서 조사 후인 2012년 9월 이후에도 20만 7,000명의 실업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상태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과 함께 장기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은 도입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 대한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현저하게 달라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논란은 이번 결산위원회의 보고서 이후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결산위원회 보고서에 대하여 사용자단체인 CBI의 정책담당자 카자 홀은 비록 프로그램의 초기 성과가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평가한 반면, TUC는 이 프로그램은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논평하였다.

• 출처: BBC뉴스 인터넷판, 2013년 2월 22일자, 'Welfare to work scheme is failing'

영국 : 아웃소싱 된 NHS 근로자도 공공부문연금 혜택

앞으로 민간부문으로 고용 이전되는 NHS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재무성이 밝혔다. 2013년 말부터 시행될 이 조치는 민간부문 회사들이 정부 서비스 계약을 위한 입찰을 좀더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파이

낸셜 타임스(FT)는 전했다.

지난 1999년부터 민간부문으로 이전된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TUPE 규정(사업이전(고용보호) 규정)에 따라 이전되기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받아 왔다. 이들은 또한 대략 비슷한 수준(broadly comparable)의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



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민간서비스 공급자들은 “이 규정은 정부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NHS 트러스트들과 경쟁할 때 민간업자들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 그동안 NHS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었던 민간업체들은 ‘비슷한 수준’의 연금 혜택을 보장받기 위해 이 제도하에 있는 NHS 트러스트들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연금비용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민간업체들에게 거의 동등한 자격에서 NHS 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이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위탁받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무성은 추후에 민간업체들의 연금 부담액(기여비용)을 정할 계획이다.

재무성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강제로 민간부문

으로 이전된 근로자들에게 공공서비스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축적된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공정 정책(Fair Deal policy)’을 준수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노동조합들은 이 조치가 NHS 연금 가입자의 수를 유지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연금 정책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변화는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 시행 전에 이미 민간부문으로 이전된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 출처: 피플매니지먼트, 2013년 2월 25일자, ‘Outsourced NHS staff ‘to keep public-sector pension’

영국 : 출산휴가 복귀 여성 7명 중 1명은 고용조정

영국의 한 로펌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산휴가 복귀 여성 7명 중 1명은 고용조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 Slater & Gordon과 리서치 회사 OnePoll이 1,000명의 출산휴가 사용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하여 휴식을 취한 여성 근로자들의 40%는 복귀 후 직무가 변경되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근로시간 감축 또는 좌천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 대상 중 10% 이상은 휴식기 동안의 대체 근로자들이 복귀 후에

도 여전히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7명 중 1명은 복귀 후 적절한 직무를 찾지 못하여 결국 고용조정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하여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는 경제위기 이전에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해고 등은 매년 3만여 건 정도 발생하였으며,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논평하였다.

그러나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불이익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적 구제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를 받은 여성 근로자들 중 약 10%가 인사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3% 정도만이 차별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Maternity Action의 로절린드 브래그씨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주로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저임금 계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법적 차별시정 절차를 감당할 경제적, 사회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피해자들의 성향을 감안한다면, 올해 고용위원회의 소송비용제도(1,200파운드(한화 약 206만 원) 선불제)가

도입될 경우 고용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더욱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고용위원회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해고와 불이익 관련 시정청구는 2,000건 내외가 접수되고 있다. 반면 Maternity Action에서의 임신 및 출산 차별에 관한 전화 상담은 최근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보 자료의 다운로드 건수가 39만 7천 건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구제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출처: 가디언 인터넷판, 2013년 3월 9일자, 'One in seven women are made redundant after maternity leave'

영국 : 카메론 총리 “견습제도, 새로운 규범 돼야”

견습제도(apprenticeships) 활성화에 대해 영국 총리가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는 견습제도를 대학을 가지 않기로 결정한 고졸자들을 위한 새로운 규범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카메론 총리는 “일자리에 기반한 훈련(work-based training)이 영국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는 우리의 미션의 가장 핵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버킹검셔에 있는 훈련아카데미를 찾아 사용자들, 교육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청년층을 위한 견습제도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총리의 이번 방문은 전국견습주간(National Apprenticeship Week)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정부가 더 많은 청년들이

양질의 훈련 코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며 정부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1~2012년 동안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견습제도 참여를 시작했다. 카메론 총리는 견습제도가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하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진정 최고의, 고도로 훈련된 노동력을 창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카메론 총리는 “견습제도를 개혁하고 강화하며, 수준을 향상시키고 제도를 좀더 엄격한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정책은, 견습제도가 갈수록 더 경력의 첫 단계로 보



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좀더 도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내가 견습제도가 청년층들(대학을 가거나 견습제도에 참여하거나)에게 새로운 규범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이다”라고 주장했다.

카메론 총리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견습제도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견습의 기회를 잡고 싶어 하고, 잡을 준비가 돼 있으며, 또한 성공하려는 열망이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이용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 정재계에 확산되고 있는 독일 따라잡기 열풍을 반영하듯, 그는 독일에서 다수의 10

대가 시험이 끝난 뒤 대학을 가거나 견습제도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들며 “영국은 독일을 따라가야 한다(The UK should emulate Germany)”고 강조했다.

한편 그의 이날 발언은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가 앞으로 10년 뒤에 견습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022년까지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해 연간 최대 34억 파운드(한화 약 5조 8,82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 발표한 뒤에 이뤄진 것이다.

- 출처: BBC뉴스 인터넷판, 2013년 3월 11일자, ‘Apprenticeships to be ‘the new norm,’ says David Cameron’

프랑스 : 공무원, 질병휴직에 보상금 지급 유예기간* 시행 폐지

마릴리즈 레브랑슈(Marylise Lebranchu) 공무원장관(국가개혁장관)은 경제 일간지인 Les Echos 21일자 인터뷰에서, 지난 2011년 말 피용(Fillon, 사르코지 정부) 내각에서 도입했던 공무원들의 병가 보상금 지급 유예기간 시행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이 정책이 “부당하고,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며, 차기 재정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3년 하반기).

또한 그녀는 이로 인한 재정적인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며, 그 액수는 약 6천만 유로(한화 약 874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 국회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었다. 당초 공공부문에 이 기간을 도입했던 목적은 점차 증가하는 결근율과 무분별한 결근 사례를 줄이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불평등을 줄이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의료보험 및 질병 보상금

* 지급 유예기간(délai de carence)이란 질병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까지 3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말한다. 즉 4일째가 되는 날부터 보상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민간부문에서만 시행되는 것이었으며, 2011년 말, 2012년 초부터 1일에 한하여 이를 공공부문에도 적용시켜 시행해 왔다.

에 있어서 더 큰 불평등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이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2012년 7월에 발표된, 보건경제연구소(Institut de recherche et de documentation en économie de la santé)의 조사에 따르면, 민간부문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한 근로자의 64%가 3일에 해당하는 모든 부담금을 사용자로부터 받았으며, 약 2%는 부분적인 지원금을 받았다. 또한 250명 이상을 채용하는 대기업의 경우 77%가, 5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47%가 지급 유예기간 동안에 사용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관리자의 경우 82%, 육체노동자의 경우 51%였다.

공공부문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이 생길 경우, 첫 석 달 동안 국가가 전체 의료비를 부담하고, 이후부터는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민간부문에서 병가가 발생할 경우, 의료보험이 해당 근로자의 총임금의 50%를 부담하고(근속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이어 8일부터 38일까지는 총임금의 90% 이상을, 그 이후에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부문 내에서 보상금의 수위는 같지

않다. 가령, 총 월급 2,000유로(한화 약 291만 원)를 받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정규직이면서 기업과 이에 대한 협약을 맺은 근로자는 전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비정규직이나 1년 미만의 정규직의 경우 1,490유로(한화 약 217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결근율에 대한 상반된 결과도 나타났다. 지난 2월 12일 발표된 노동부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주단위로 계산을 했을 때,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들의 3.9%가 자신의 질병 및 자녀의 질병 때문에 최소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부문에서 1년 이상의 정규직의 경우 3.7%로 나타났다. 하지만 1년 미만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등)의 경우 이 비율이 2.6%로 급감했다.

- 출처: 1. Les Echos, 2013년 2월 20일자, ‘Les fonctionnaires seront à nouveau payés le premier jour de leur arrêt maladie’
- 2. Le Monde, 2013년 2월 21일자, ‘Arrêts maladie : vers la fin du jour de carence des fonctionnaires’
- 3. Le Monde, 2013년 2월 21일자, ‘Arrêt maladie : les vraies inégalités sont entre précaires et titulaires’

프랑스 : 임금, 고용, 불안정 - 경제위기의 파장

경기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인 유로존의 더블딥이 프랑스에서 2010년 짧은 회복 이후 제로 성장으로 나타났다. 3월 6일에 발표된 프랑

스 통계청(INSEE)의 “2013년 고용과 임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악화, 임금 하락, 공무원의 구매력 저하, 고령자의 고용불안정 심화, 국가공무원



지위의 실추 등 모든 면에서 침체가 나타나고 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경기에의 안착은 먼저 고용과 관련된 통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1년 상반기에는 8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역동성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반기를 지나면서 임금근로자 고용의 경우 2008년도 상반기 최대치였던 30만 개 이하로 떨어졌다.

2011년 7월부터는 2010년 말부터 감지되었던 간접고용의 하락이 심화되었다. 주요산업 부문에서는 새로운 인원감축이 이루어졌고, 2008년과 2009년에 증가했던 비산업 부문의 고용이 후퇴한 것 또한 상황이 악화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층 취업의 불안정

이러한 고용불안정은 법정 퇴직연령 연장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증가로 경제활동인구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령자의 고용률과 활동률은 '정기적이고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으나 청년층의 고용률은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실업률은 2011년 2사분기부터 현저하게 증가했다. 또한 언제나 그렇듯 간접고용(interim), 계약직(CDD) 등의 임시직과 비숙련직에 종사하는 경우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했다. 그 이유로는

일단 고용불안정이 고령자층보다 청년층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고, 경기변화에 민감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고령층보다 더 높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같은 불경기 속에서는 기업이 비숙련직을 유지할 확률보다 해고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가 한참 진행되던 2009년의 상황과 비슷하게, 전해에는 취업 중이던 근로자가 다음 해에 해고될 위험성이 비숙련근로자의 경우 8.8%, 관리직의 경우 1.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보호되기는 하지만 명목임금의 경우 2009년 위기 이전보다 낮은 속도로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실질임금은 2012년 경미하게 증가하기 전까지 물가인상의 영향으로 임금인상 수준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공무원 또한 허리띠를 조이는 상황이다. 공무원 최저 호봉(indice minimum)의 인상과 구매력의 개별보장제도* 수혜 조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2011년 평균실질임금의 인상은 낮아졌다. 2010년 7월부터 호봉이 동결됨에 따라 평균실질임금은 2011년 0.3% 감소했고, 2012년에도 계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Le Monde, 2013년 3월 6일자, 'Salaire, emploi, précarité : l'impact de la crise'

* 구매력의 개별보장 제도(Garantie individuelle du pouvoir d'achat): 매 4년, 같은 기간 동안의 공무원의 명목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하여 만약 명목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증가했을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아시아

일본 : 고용촉진세제의 고용창출 효과 저조, 목표의 60% 수준 도달

고용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경감하는 「고용촉진세제」의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7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2년도의 고용창출은 현재 10만 명 정도로 목표의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부터 감세액을 2배로 늘릴 방침이지만, 고용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촉진세제」는 2011년에 당시 민주당 정권하에서 시작되었는데, 종업원을 1명 늘릴 때마다 법인세를 20만 엔(한화 약 235만 원) 공제하는 제도로, 내년도부터는 1명당 40만 엔으로 공제액이 확대된다.

이용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특정사회보험노무사인 야마모토 노리후미 씨는 “기업이 이용하기 힘든 이용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그는 사업주 형편에 의한 해고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건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현행 고용촉진세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을 10% 이상 늘려야만 하는데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이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후생노동성은 감세액을 늘리면 연간 8만 명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용조건이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베 정부는 2013년도부터 새롭게 「소득확대세제」를 시작할 방침이다. 소득확대세제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이 2012년도보다 증가한 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공제액의 상한은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액 전체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20%로 설정되어 있다.

소득확대세제는 실적을 회복한 대기업이 보너스를 늘리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임금을 인상한 경우의 이용을 상정하고 있다. 단, 법인세 감면을 고용이나 급여 증가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적자기업의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약 70%에 해당하는 기업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미쓰비시 UFJ 리서치&컨설팅 종합상담부의 나가시마 에츠코 주임 연구원은 “기업에 있어서는 감세보다 조성금이 사용하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 출처: 日本經濟新聞 조간 4페이지, 2013년 2월 21일자, ‘雇用促進税制での創出効果、目標の6割どまり、12年度見通し’



일본 : 여성임금 최고치 경신, 2012년 남성임금의 70% 수준까지 격차 축소

여성의 임금수준이 증가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2월 21일에 발표한 임금구조통계조사에 의하면, 2012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여성의 평균임금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월 23만 3,100엔(한화 약 271만 원)으로 2년 연속해서 과거 최고수준을 경신하였다.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과거 최소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여성의 임금신장률은 남성의 임금신장률을 상회하였는데, 향후 여성의 활용은 디플레이션 탈각을 목표로 하는 아베 수상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는 10명 이상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49,230개 사업소의 2012년 6월 소정내급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잔업수당과 휴일출근수당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남녀를 합친 월평균임금은 0.3% 증가한 29만 7,700엔(한화 약 346만 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임금이 청년층보다 높은 베이비붐세대의 퇴직과 2008년 가을에 발생한 리먼 쇼크 이후의 정기승급 동결 등의 요인으로 인해 4년 연속 감소하였다.

여성에 대한 임금이 전년대비 낮았던 경우는 1989년 이후 단 두 번뿐으로 매년 신장률은 대체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의 경우에도 남성은 0.2% 증가한 32만 9,000엔(한화 약 382만 원)에 머물렀다. 1990년에 남성의 60% 수준이었던 여성의 임금수준은 2012년에는 70%를 넘어섰다.

여성의 평균임금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3% 증가하고, 생활관련서비스 및 오락업이 1.6%

증가하는 등 비교적 여성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의 임금신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여성 근로자는 전년보다 6만 명 증가한 2,375만 명으로 과거 최고치를 갱신했다. 한편 남성의 임금이 조금이나마 증가한 이유로는 임금이 청년층보다 많은 중고령 근로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감소경향에 있으며, 임금은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임금 증가는 물가상승률 2%라는 목표를 내걸고 디플레이션 탈각을 지향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주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수준이 증가하지 않고, 물가만 상승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수준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아베 수상은 경제계에 임금인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외에, 여성층과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육소의 정비 등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60%가 출산 이후 퇴직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며, 20대 후반부터 30대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비율은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들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고,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할 경우, 국내총생산을 1.5% 끌어올릴 수 있다고 예측한 시산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다.

육아와 일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사내 등에 설치한 기업 내 보육소는 4,000개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인가 외로 정부조성금

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 내에서는 인가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규제개혁의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 출처: 日本經濟新聞 조간 1페이지, 2013년 2월 22일자, ‘女性の賃金最高更新、昨年男性の7割に差縮む、子育て支援なお課題’

중국 : 팍스콘 공회 기층노동자대표 비중 확대 예정

지난 2월 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팍스콘(Foxconn, 富士康)은 음력설 이후에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회(노조)대표의 직선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선 노동자를 공회대표로 선출할 것이며, 관리자가 더 이상 공회대표 선거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팍스콘은 이 계획은 미국 공평노동위원회(FLA)와 합의한 행동계획의 일부로서 공회 중 기층노동자의 비중을 높이고, 동시에 공회에 대한 노동자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팍스콘은 청두(成都), 정저우(郑州) 및 선전(深圳) 등지에서 12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납품업체로 iPhone, 태블릿 PC와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FT는 이번 팍스콘의 공회선거는 미국 FLA의 지원 아래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팍스콘의 최대 고객인 애플은 2012년 1월에 FLA에 가입했고, FLA에 팍스콘 노동상황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FLA가 지난 8월 발표한 두 번째 팍스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팍스콘이 조사 후 제시한 약속은 공회선거와 노동자대표기제 및 중국 노동법 중 노동시간과 관련된 조항을 준수하겠다는 것이었다. 관련 개혁프로그램은 2013년 7월까지 완

수할 것이지만, 팍스콘은 이미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전개했다. FLA는 팍스콘의 공회는 노동자를 진정으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FT는 노동자는 18,000명의 공회위원을 선출할 것이고, 그 임기는 각각 2013년, 2014년에 만료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팍스콘 후계후이(胡国辉)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여 모든 노동자가 공회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동시에 팍스콘은 지난해 연말부터 노동자 대표권을 확대하기 시작했지만, 현재 공회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 새로운 절차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2007년 회사는 선전(深圳)에서 첫 번째 팍스콘그룹 공회연합회를 개최했고, 2008년 3월 임기로 공회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공회선거절차는 2008년 이후 변화가 없었는데, FLA의 행동계획에 따라 팍스콘은 ‘기층노동자대표 선거절차’와 관련된 새로운 공회선거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팍스콘은 공회 중 기층노동자의 비중을 높일 것이고, 동시에 모든 공장지역에서 상술한 개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의해야 할 것은 2007년 성립한 팍스콘그룹 공회연합회는 사실상 관리조직이고, 넓은 의미에서 공회는 아니라는 것이다. 선전특구보(深圳特区报)의 보도



에 따르면, 2007년 3월 팍스콘은 선전 룡화(龙华) 공업단지에서 그룹 공회연합회 성립대회를 개최했고, 71명의 공회회원 대표를 선출하여 팍스콘그룹 공회연합회 제1기 위원회와 경비심사위원회를 선출했으며, 그룹 대외사무실의 팀장이었던 천평(陈鹏)이 제1기 공회 주석으로 당선되었다. 상술한 매체는 천평은 팍스콘 모회사 홍하이(鸿海) 귀타이밍(郭台铭)의 심복이며 팍스콘 대륙관리대오 가운데 신뢰를 받고 있는 일원이라고 보도했다. 팍스콘은 공회연합회 위원회는 기타 공장구역 공회조직을 관리감독하고 있고, 5년 임기의 주석과 20명 위원은 앞으로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팍스콘은 선전공장지역을 예로 선전공장지역의 공회대표 가운데 70%는 일선 노동자이고 나머지는 관리층과 기타인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FT는 내부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노동자들은 공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회위원회에서 거의 발언권이 없고, 팍스콘의 현재 공회선거는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하며 또한 공회대표도 아니고, 50% 이상의 인원은 관리층이라고 보도했다. 의미심장한 것은 팍스콘은 지난 2월 4일 관리층은 상술한 기층노동자 공회대표

선거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지만, 팍스콘 그룹 공회연합회의 개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점이다.

팍스콘이 기층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오래 동안 팍스콘의 노동상황을 연구해 온 베이징대학 사회학과 루후이쥘(卢晖临) 교수는 FLA와 같은 조직보다 지역NGO와 지역 공회조직과 더 협력하여 공회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카이밍(刘开明)은 팍스콘의 일련의 투신자살사건과 파업사건에서 보면, 공회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고, 성립된 공회가 한 유일한 활동도 귀타이밍을 지지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역사에서 보면, 팍스콘의 관리층은 공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류카이밍은 팍스콘이 FLA의 지원 아래 노동자를 교육시켜 실시하는 선거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기제를 통해 노동자가 공회를 주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만약 할 수 없다면 공회선거는 하나마나한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凤凰网, 2013년 2월 5일자, ‘富士康工会将扩大基层员工代表比例 外界期待不高’